

학회소식과 동정

학회소식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한국비교공법학회와 지난 4월 29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중·일·몽 동북아 4개국 입법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한국비교공법학회 이동훈 회장, 미국헌법학회 김영수 이사장 등 국내 법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또 학술대회는 총 4세션으로 사후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국가의 입법적 과제(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부연구위원), 새로운 국가모델로서 보장국가론의 의미와 가능성(목포대 홍석한 교수), 몽골의 현대 공법학의 과제(몽골국립대 우양가 미아그마 교수), 다문화 공생 국가에 있어서 공법학의 과제(큐슈국제대 키무라 타케시 교수), 중국헌법상헌법해석과 헌법감독—중국식 위헌심사제도의 특징, 문제점(중남민족대 손한기 교수)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새로운 국가모델 구축을 위한 공법학의 과제를 대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로 진행했다.

•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 명예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 명예교수)는 오는 2016년 6월 18일(토요일) 13:30~18:00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대강당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계획법의 대응 전략과 과제」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될 주제와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환경정책결정에 있어서 국토계획의 역할과 과제 : 허강무 교수(전북대 공공정책학부)
지정토론에는 임현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홍선기 박사(동국대 비교법연구소), 한명진 박사(대법원 재판연구관)가 참여한다.
- 국토계획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과제 : 이순자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지정토론에는 김재광 교수(선문대), 김은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기후법화팀장), 최용진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공간정보연구실장)가 참여한다.
- 친환경에너지 타운건설의 법적과제 : 최경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지정토론에는 전훈 교수(경북대 행정학과), 성봉근 박사(고려대 강사), 김동련 교수(신안대학교)가 참여한다.
- 지속가능한 개발과 토지공법의 과제 : 김성배 교수(국민대)
지정토론에는 이혜원 박사(헌법재판연구원), 김종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류지웅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참여한다.

· 한국가족법학회(회장 이상욱 교수)

한국가족법학회(회장 이상욱 교수) 오는 2016년 6월 24일(금)~25일(토) 리벤시아 리조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3) 「가족법상 의무와 이행의 강제」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될 주제와 발제자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중국법상 부모의 양육의무와 이행의 강제: 姚辉 教授(中国人民大学)

토론에는 이은정 교수(경북대)가 참여한다.

- 중국에 있어서의 상속법의 변천: 杨立新 教授(中国人民大学)

토론에는 김성수 교수(경찰대)가 참여한다.

- 일본법상 부모의 양육의무와 이행의 강제: 犬伏由子 教授(慶應義塾大学)

토론에는 양민정 변호사(양육비이행관리원)가 참여한다.

- 일본에 있어서의 상속법의 변천: 水野紀子 教授(日本東北大學)

토론에는 박인환 교수(인하대)가 참여한다.

- 자녀양육법제의 현황과 전망: 전경근 교수(아주대)

토론에는 이원중 판사(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 한국 민법상 부모부양제도: 조은희 교수(제주대)

토론에는 정구태 교수(조선대)가 참여한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방안: 박복순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에는 차선자 교수(전남대)가 참여한다.

- 상속에 의한 부양제도의 개선: 서종희 교수(건국대)

토론에는 배인구 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동 정

·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지난 4월 25일 대검찰청에서 있었던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위철환(58세)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변호사가 없는 지역주민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위 변호사는 ‘앞으로도 미력하나마 사회정의 실현 및 인권 옹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양양시키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